

문화일보 오피니언

기사 게재 일자 : 2013년 10월 24일

프린트 ✕ 닫기

<時評>

한·일 언론인의 솔직한 대화

박철희/서울대 교수, 일본연구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최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저널리스트 포럼에 발제자로 다녀왔다. 한·일 관계가 차디차고 가시돌친 시기에 열린 회의라 양측이 이견(異見)을 표출하는 장면도 많았지만, 절제된 용어를 구사한 진솔한 토론이 이뤄졌고, 서로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나중이라도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화가 더 진솔하게 되도록 서로 노력했다.



가장 날선 공방이 이뤄진 분야는 중국을 바라보는 한·일의 시각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였다. 한 일본 언론인은 “한국은 미국의 우호국인 청색국가냐, 아니면 중국의 우호국인 적색국가냐” 하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일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인식은 일본인들에게 공통적이었으며, 중국의 전략에 경계감과 위화감을 숨김없이 토로했다. 한국 측은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이 중국에 치우친 외교를 하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분단국가로서 북한 문제의 관리를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 일본 언론인은 “한국에서 1965년 체제는 붕괴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일본으로 보자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보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재해석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였다. 한국 측은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더욱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조속한 시일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강제 징용 관련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적인 상식에 합치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단, 민주주의가 정착한 한국에서 삼권분립으로 인해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법적 판단에 압력을 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2015년을 대비해 양국의 진지하고 성숙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북한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특기할 만했다. 북한을 보는 이견 제시는 적었고, 한반도가 자유로운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단, 일본 측은 통일된 한국이 핵(核)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급속히 냉각되고 방문객도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영토 문제를 둘러싼 날선 공방은 없었다. 영토 문제에 대해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해결을 하지 않는 해결책’을 추구하자는 제의에 대해선 큰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서로가 상대방의 주장에 공감하는 장면도 많았다. 일본에서 폐쇄적 자국주의적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 언론인의 문제 제기에, 일본 참가자들도 신오쿠보의 헤이트 스피치를 예로 들면서 불건전한 민족주의의 극치이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수치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원전(原電) 오염수 염려 때문에 취한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도쿄올림픽 유치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지만, 추석을 앞둔 한국 수산관계자들의 걱정과 한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한국 측의 설명에 대부분 납득했다.

일본의 한 기자는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던 일본에 대해 “과학적 견지에서 냉정히 대응해 달라”던 미국의 반응과 현재 일본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대응이 똑같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식품 안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결코 과잉은 아니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일 양국 갈등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한 언론인은 단기적으로 보면 미디어가 상업주의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지만, 각 언론사 내에서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바른 소리가 나온다면 언론의 자정작용을 과소평가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국익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게 언론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느냐는 한 일본 기자의 고백적 토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